第281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3 號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2月10日(火)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라. 재외동포재단 소관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5.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9.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10.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案件

10.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1. 2009년도 업무보고 ····· 5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라. 재외동포재단 소관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성곤·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충조·김충환·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종희·박주선·백재현·서종표·송영길·송영선·안규백·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제창·이광재·이명수·이미경·이성남·이용삼·이용섭·이윤석·장세환·정하균·조배숙·진성호·최문순·최영희·황우여 의원 발의) ····· 52
3.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성곤·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충조·김충환·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종희·박주선·백재현·서종표·송영길·송영선·안규백·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제창·이광재·이명수·이미

경・이성남・이용삼・이용섭・이윤석・장세환・정하균・조배숙・최영희・황우여 의원 발의) ·· 52
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김태환・정갑윤・유정복・권영세・서상기・유기준・남경필・이경재・윤두환・김학송・박종근・김성곤・최경환・이해봉 의원 발의) ····· 53
5.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강창일・김재윤・이종걸・김상희・장세환・권영길・강기갑・문학진・최인기・유성엽・김낙성・우윤근・박은수 의원 발의) ····· 53
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세연・김용구・임영호・권선택 의원 발의) ····· 53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53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53
9.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 53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위원회는 현인택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간사협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해서 우선 처리하고, 이어서 당초 예정된 업무보고와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위원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간사 위원이신 황진하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서로 요약이 돼 있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보고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발언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문학진 간사님!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현인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우리 외통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중점적으로 현인택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두 부분에 있어서 현 후보자가 모두 상당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증여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양심, 양식을 의심케 하는 논문의 이중 게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위장전입・이중국적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배우자

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비리와 의혹의 백화점인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을, 흠결을 안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 후보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실수였다거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는 과장된 것이다 이런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과 관련해서 현 후보자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그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는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자질, 능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 후보자 본인이 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입안을 자신이 주도했다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철회하고, 발상의 대전환을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없음을 밝혔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면 대화가 복원되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다라는 매우 공허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 후보자가 각종 논문 또는 기고문 등을 통해서 밝힌 자신의 소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북 강경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의 논문과 기고문들을 저희가 적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신 있게는 답변이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소신대로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무슨 일부분만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것이다, 왜곡 전달된 것이다,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저희는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고,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서도, 더더군다나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전혀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기가 힘든 인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인택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임명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입니다.

우리 분단 현실에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통일부장관은 소신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현인택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덕성 문제는 이분에게는 거론하는 것조차 힘겹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이나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가 되었던 탈세 의혹이라든지 편법 증여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게 한 것 등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소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윤리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된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의혹과 도덕성의 문제가 어제 공청회를 하면서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이 되고 제기가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인택 후보자의 도덕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을 지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북관계로 인해서 극심한 남남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틈타서 북한은 통민봉관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획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가장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견지해야 할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현 장관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과정에서의 답변을 무소신 그리고 무원칙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정말 두루뭉술한 그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 폐기에 대해서도 그랬고 6·15 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신과 철학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인택 후보자는 현재 대단히 어렵

게 되어 있는 남북 문제를 건전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현인택 장관후보자가 통일 분야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 왔고 또 그다음에 단순히 통일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의 전문가로서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아니면 자유선진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신과 원칙이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한나라당 쪽에서 생각한 것은 오히려 분명하게 비핵 개방 3000을 자기가 주도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원칙은 지키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관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한 것을 소신이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런 문제를 품에 있어서 유연성도 가지면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단순한 통일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품에 있어서 국내적 요소도 잘 고려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국제적인 그러한 식견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는 점을 상기를 하면서 충분히 통일부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일부 제기되었었던 그러한 도덕성과 준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흠결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참 아쉬웠던 것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자기가 의혹성을, 또 아니면 어떤 의문점을 발견했으면 후보자에게 묻고 충분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완전히 관계 기관으로부터도 이것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처리였다고 하는 것도 아예 그냥 질의만 던져 놓고 본인의 해명도 잘 듣지 않고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또 아니면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마치 법을 위반했다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규정 지어 버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청문회 속에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준법성 면에 있어서도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증여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등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거쳐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도덕성이나 또는 준법정신 면에 있어서도 통일부장관으로 임무 수행하는 데 크게 결정적인 결함이 아니라 그것은 적법 절차였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문성 면이나 또 도덕성 면이나 준법정신 면에서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또 통일정책을 분명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교섭단체 세 분 간사님들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박진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 또 박선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만, 양보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현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방과 외교 관계를 할 때도,

뭐 전문가이시지만, 대사 임명에 아그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는 어떤 나라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매우 큰, 직결된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의 임명에 북한의 눈치를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고 더군다나 군사적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그분을 이 자리에 앉혀서 지난 1년보다도 더 어려운 관계를 만드는 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하는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그분이 실력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른 그 적합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임명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여기에서는 이미 신뢰가 구축되기 어려운,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을 굳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 말씀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 나라의 각료를 임명하는 것은 대사를 임명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장관, 또 대통령과 각료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깊은 신뢰와 또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충실하게, 또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국의 의향이라든지 또는 그쪽의 관심에 대해서 부응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현인택 장관내정자의 경우에는 학문적 연구 역량이나 또 정책수립 능력이나 대통령과의 긴밀한 신뢰관계로 볼 때 더할 수 없이 아주 훌륭한 이러한 장관후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여기서 밝힌 바 있고, 또 특히 고무적인 것은 본인이 알려진 바와 같이, 대단히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특히 이 남북관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신축성 있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안을 잘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당,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과 지적을 충실하게 반영한 경과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 퇴장)

또 요청하시는 자료도 전부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신임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 및 통일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라. 재외동포재단 소관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다

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오늘 외교통상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현안 중 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작년 말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9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외교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1982년 이후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여건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과 다자적 접근을 중시하고 경제회복, 이라크, 아프간 등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와 관련 북한의 강경입장 지속 가능성과 함께 북한 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기여 및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 증대와 지구온난화, 대테러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외교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8대 핵심 외교과제에 중점을 두어 2009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대 핵심 외교과제는 사안 대응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3대 우선추진 과제와 5대 지속추진 과제로 나누었습니다.

3대 우선추진 과제로서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두 번째가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들었습니다.

외교 분야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서 5대 지속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두 번째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세 번째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네 번째로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의 제고, 끝으로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등입니다.

첫 번째 우선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위기 대응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G20 금융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 언론 및 신용평가기관 소재 공관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안정화 포럼에 조기가입을 위해서 현재 미·영·독·이태리 등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EU, 인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조기에 실현하고 DDA 협상의 조기타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보호무역 대응 및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적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서 보호무역조치 자제 논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업계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1월부터 외국의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핵심 수출시장에서의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의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과정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팀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4월 하노버 박람회 등 계기에 투자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서 주요국의 SOC 사업 등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경제회생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WEST 프로그램 또 KOICA 봉사단원 파견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화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등 외화 예산은 환율 상황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추진 과제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하여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의 정립 그리고 북핵·북한 문제 및 금융위기 극복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양국 간 협력범위의 전방위적 확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의 강화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동맹 재조정 및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미군기지 재배치의 원활한 이행, 현물지원방식 등 방위비 분담제도의 개선 등 동맹 재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대북 억지력 및 전략동맹 발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추진 과제는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우선 검증 문제 타결책 및 2단계 마무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미 간 공동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3단계 협상대책도 곧 관계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증과 2단계 마무리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 시 원칙에 입각한 대북 협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비핵 3단계 협상 추진을 위해 핵폐기 이행 시의 상응조치와 거부 시의 불이익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추진 3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렸고 이어서 5대 지속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추진 과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입니다.

먼저 이들 3국과의 상호 윈윈하는 실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자 간에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우리의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중·러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 핵 문제 또 북한 문제 관련 3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자 간 각각 우호 관계 심화 및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중국과의 미래지향적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한·러 대화 출범 등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탈북자 문제 등 갈등요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정상급 외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과 한중일 간 3자 협의체제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미일 3자 협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 금융위기,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 3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3자 협의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다자회의 계기에 3국 간 정상회의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중일 3자 협의에서는 우선 금융위기 대응협력을 강화하고 3국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해서 역내 실질협력의 구심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추진 과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아시아 외교와 관련 6월 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제주도 개최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 강화 등을 위해서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EU 및 중앙아시아와는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함께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지역 순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지역과는 10월에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대아중동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 및 한·아프리카 포럼을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속추진 과제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캐나다, GCC 국가와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페루, 호주, 터키 등 5개국과도 FTA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순방 및 초청 외교를 적극 활용해서 중앙아시아, 아중동, 중남미 등에 대한 에너지 협력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에너지 협력외교의 역량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22개 공관의 에너지 협력자문관을 적극 활용하고 76개 에너지 거점공관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문 유력인사 초청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인맥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속추진 과제는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과 위상 제고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서 2013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KO 참여 확대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아울러 ODA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접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아랍 및 중남미 문화축전 개최 등 쌍방향 문화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왕릉, 동의보감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속추진 과제는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해외안전민관협의체를 발족하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체류자 및 여행자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과 사증 협정을 통해서 출입국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조직·인사 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정상외교 성과 등 주요 외교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왜곡보도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본부 및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국별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공관장들의 홍보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인사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 외교 환경과 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본부 조직과 재외공관망을 점검하겠습니다.

본부 과 단위 부서를 20% 감축하였으며 재외공관 조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해서 선진 인사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평가시스템 강화와 함께 인적쇄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관 충원과 교육훈련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제2외국어 능통자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로서는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 신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도·실용주의적 기조하에 다자적 접근을 통한 미국의 지도력 회복 그리고 주요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태지역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접근 등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는 우선 양국 간 동맹을 중시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지하는 한편 북핵·북한 문제 등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간 안보·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신행정부 측은 미 대선 이후 2회의 정상급 통화 및 외교장관 간 통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적극적 한미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 측의 구상과 입장은 우리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양국 간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발전 구상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과 발전동력을 강화하고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대북 억지력과 함께 전략동맹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월 중, 다음 주에 외교안보수석의 미국 방문 그리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서 미 신행정부 측과 긴밀한 정책공조 및 협력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가급적 가까운 기간 내에 정상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이와 같은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중 정상 상호방문 계기에 동맹 미래비전 선언이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미 간 전략대화와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협력의 확대와 동맹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미국 내 유관 싱크탱크 및 의회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8일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주요 결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검증원칙과 관련해서 북측이 현 단계에서는 시료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의 명문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검증의정서에 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단계 마무리 일정도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불참으로 미확정된 중유 20만t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지도원칙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달 다음다음 주에 모스크바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단계 이행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능화 이행 관련 현재 총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 사항이 완료된 상황으로 8000여 개의 사용후연료봉 중 6000여 개가 인출되었으며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와 미사용 연료봉 처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사용 연료봉 처리와 관련 정부 실사단이 지난 1월 15일 방북해서 영변 핵시설을 시찰하고 미사용 연료봉에 관해 북측 관계자와 기술협의를 가졌습니다.

한편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2월 초 현재 북한에 중유 68만 8000t 상당이 지원되었습니다. 미확정된 중유 20만t 공급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참여 문제는 검증 관련 진전이 이루어지는 대로 구체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2월 19일에서 20일간 모스크바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검증 문제, 미확정 중유 20만t 등 주요 현안들이 6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및 해결되어 6자회담 과정이 진전되도록 미국을 포함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주 한미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의 공조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9일 방한할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계기에 북핵 문제의 주요 현안을 포함, 대북정책 일반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측 북핵 담당인사가

정해지는 대로 단기 및 장기전략에 대한 한미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2009년도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과 현안보고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숙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한미 관계의 앞으로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의 의회 교류와 협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긴밀한 정치적 대화를 위해서 앞으로 국회, 특히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이런 한미 관계와 또 대외협력 관계 발전,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금년에 해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이 저술한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책자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론서입니다. 위원님들의 ODA 관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책자를 만드신 박대원 총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대원 총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러 위원님!

281회 국회(임시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009년도 예산심의 국회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국제협력단은 글로벌 리더 양성, 자원외교 측면 지원,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주요 국정과제를 확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최빈국의 빈곤 극복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써 UN도 새천년 목표인 MDGs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OECD DAC 국가를 중심으로 지구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최빈국의 빈곤 극복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NGO, 대학 등 시민단체들의 국제협력사업과 민간업체와의 PPP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2009년도 사업계획, 무상원조 사업 선진화, 경영 효율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UN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국제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유지하여 전략적으로 선정된 56개 협력대상국에 원조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비교우위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기초해서 7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중에서 아직도 빈곤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산림녹화·IT강국 부상

등 단기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수행을 위해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개도국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신규 추진을 통해 기후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시 민·관 참여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 정부의 에너지·자원 외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조사 등 관련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자원 분야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별 추진 방향은 배포해드린 보고서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제협력단 예산은 전년도 2923억 원에서 738억 원이 증가된 3661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협력사업비 333억과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신규 추진 예산 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사업이 확대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야별 사업계획은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등 7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126건, 신규사업 29건 총 54국 155개 사업을 1601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포해드린 보고서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개도국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개도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과 민·관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써 향후 5년간 5000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이 전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 개도국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2억 불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후변화 대응 포럼 및 박람회 개최와 무상원조 기술지원 사업으로 4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관 공동의 참여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 기후변화시장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외 무상원조사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선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여외교 확대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총괄수행기관으로 국제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정상외교와 에너지 협력 외교가 강화됨에 따라 무상원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단의 사업비는 최근 5년간 3배가 증대되었으며 정부는 2012년까지 ODA 사업 규모를 확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무상원조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 7월 국무총리 주재 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우리나라의 DAC 가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국제사회 규범에 맞도록 원조사업 수행체계를 선진화하고 원조 관행 개선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상원조사업의 선진화 계획입니다.

국제 규범에 입각한 사업 수행체제로 개편하여 무상원조기관의 전문성과 원조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 결과를 사업 기획에 피드백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도국의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패키지 구성을 위해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단과 수출입은행 간 업무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유·무상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현재 29.4% 수준에서 DAC 평균인 94.5%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협력대상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단체 지원 및 PPP사업 확대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국민 참여형 사업을 증대하는 한편,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등과도 MOU를 체결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 국제협력단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효율성 10%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우리 협력단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 도출이 가능한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 효율성 최대치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수립과 해외 현장 사업 위주 업무 추진을 위한 과감한 업무 위임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업무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영효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중 동 계획을 완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무상원조사업이 지속적 증가 및 ODA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국제협력단 일반현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성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적 다변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해외 한국학을 심화·확산하며 해외의 지한(知韓) 인맥과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소개 강화와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한국 소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해외 기반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해서 90명의 인원을 2011년 말까지 81명으로 10%를 축소할 계획이고 조직도 3개 부서를 줄여서 2실, 6부, 1센터, 여섯 곳의 해외사무소로 개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 재단의 예산은 총 1125억 원이며 이 중 여유자금 500억 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625억 원, 지출은 72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출내역은 국제교류재단 기금운영 및 경상사업비로 531억 원, 그리고 재외동포교류지원비로 19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재단의 여유자금 중 300억 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정부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의 국제교류재단의 사업개요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재단은 해외에서 한국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 대학에 한국 관련 교수직 설치, 강좌운영, 학술프로그램 지원 및 주요 정책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61개국 294개 대학에 한국 관련 강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며, 13개국 66개 대학에 93개의 교수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CSIS, AEI, Heritage 재단, 영국의 IISS, 프랑스의 IFRI 등 15개국 69개처의 주요 정책연구소를 지원하였으며 Korea

Society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체한연구 펠로십, 한국어 펠로십, 대학원생 장학제도 등 해외 한국전공 학자·전문가·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한국학의 후계학자 양성, 지한인맥 저변 확대 및 한국 관련 출판물의 발간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5개국 3703명의 한국전문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인적교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해외 주요 인사들과 차세대 지도자 초청사업 등 인사교류사업을 통해 매년 90여 개국 1400여 명을 초청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양자 13건 및 다자 포럼 1건 등을 매년 개최하여 Track 2 차원의 외교통로를 유지 및 개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재단은 한국문화의 해외 소개 및 국내에서의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하나인 해외 박물관 지원사업으로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대영박물관 등 7개국 18개의 세계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여 해외에 소장된 한국 유물 1만 2000여 점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KF 문화센터를 옛 호암갤러리 자리에 마련하여서 쌍방향 문화교류의 장으로 국내에 외국문화를 소개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화 및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 자료 지원사업입니다.

재단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KOREANA, 정치·경제·사회 등 한국의 현안을 소개하는 Korea Focus 등 다양한 외국어 도서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해외 도서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한국 관련 도서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2005년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9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09년도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중에 교수직 및 강좌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미국 프린스턴대학 등 46개국 93개 대학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22개국 57개 처와 7건의 기획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지원사업으로는 미국 CFR, 영국 IISS 등 7개국 24개 처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체한연구 펠로십 사업으로 17개국 47명, 한국어 펠로십 사업으로는 36개국 60명, 해외 외교관 대상 한국어 연수 사업으로 18개국 28명,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장학사업으로는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 8건의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페이지의 인적교류사업입니다.

우선 인사교류사업으로 약 130여 명의 해외 유력인사 초청과 300여 명의 미국 평화봉사단을 재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지도자 425명, 청소년교류사업으로 6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건의 국내 인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의 고위급 대화채널인 포럼을 15건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10건의 국내에서 개최되는 KF 포럼과 15건의 국제회의 지원, 11개 민간단체 해외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국가와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상설 협력체 활용 사업을 신설해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와의 정상급 포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과의 포럼을 통해서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4페이지의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우리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교류 협력 지원사업으로 50개국 4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예술 소개사업으로는 미국 버지니아박물관 한국실 설치 등 46개 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업무보고 시에 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한국실 지도의 독도 누락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정을 하고, 최근에 김

성엽 기획이사가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단문화센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대미술 교류전 등 18건의 전시와 서울국제음악제 등 5건의 공연, 7건의 다문화 행사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출판 자료 지원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종합 계간지인 KOREANA를 8개 언어로 매호 약 3만여 부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130여 개 도서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그 외 Korea Focus와 한국역사 바로 알리기 발간, 문화 소개 시리즈 발간 및 한국 소개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의 재외동포 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예산을 195억 원으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9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포재단에 대한 예산이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족에 따른 것임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명세서는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의 전담기구로서 우리 재단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세계 사회를 연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으로서 변함 없는 신뢰와 명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상 재외동포재단 업무보고까지만 듣고 오찬 정회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입니다.

재외동포 사업에 대해 남다른 식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업무현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2008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되어 2009년 현재 51명의 임직원이 2008년 대비 약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단은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동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의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역별 중점 지원사항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동포사회에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지역의 경우 현지 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일본 지역은 법적 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 중국 지역은 경제·교육·문화 등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 러시아·CIS 지역은 언어·문화 등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중점 지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사업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 없이 6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둘째,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입니다. 셋째, 한상 활성화를 통한 한민족 경제인 인적 자산화

입니다. 넷째,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입니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는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의 20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건 이사장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외교통상부와 또 산하기관의 2009년 업무현황 보고를 오전에 전부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외교통상부장관과 산하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외교통상부와 3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외교통상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할 경우에 우리 입장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료채취는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이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거부하는 경우에 우리 입장이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5자 간에 협의를 해서……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질의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우리 입장이 뭐냐 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도 외교노력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박선영 위원 그건 답이 아닌데요.

그럼 중유 100만t 이거 거부하실 건가요? 대북 경제지원, 에너지지원 안 하실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현재 지금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 하실 거지요?

클린턴 국무장관이 19일날 방한합니다. 방한 목적이 뭔가요?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겠고 그 일환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요.

○박선영 위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북한은 이미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2006년에 폭발시켰다라고 해서 핵 장치가 아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같습니다. 그것을 디바이스(device)로 표현하건 뉴클리어 웨펀(nuclear weapon)으로 표현 하건 간에 그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미 측 스스로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선영 위원 외교관 출신이 용어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용어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의가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핵물질이 밖으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만 금지시키는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디바이스인지 핵 인스트루먼트(instrument)인지 뉴클리어 웨펀인지 하는 것은 현재로는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증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시료채취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도 우리 입장이 아직 없고 외교적인 노력만 하실 거고 북핵 문제도 지금 같다는 건가요?

국민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우리 입장이 뭔가 이것을 조금 더 나중에 문서로써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현안보고에는 한미 FTA 문제가 빠져 있던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관련해서 로비스트 고용하셨지요? PPS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미대사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우리 외통부 대변인은 한미 FTA 관련해서는 로비스트 고용 안 했다고 얘기하던데 장관께서는 지금 고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FTA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매년 로펌이라든가 컨설트 회사를 주미대사관에서 항상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FTA 문제도 거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번째 항이 분명히 '한미 FTA의 대 의회 로비활동'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왜 그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나요? 제가 PPS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계약내용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대변인은 한미 FTA하고 관계없는 로비스트다라고 거짓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미대사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까지 외교부 본부가 홈페이지나 타이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액수라는 것이 큰 액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미대사 재량으로 하는 정도의, 한 10만불 정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저는 지금 액수를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거짓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로비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하고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미 관계는 계속 엇박자를 내왔고 현재 경제위기로 보나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또는 당선인 시절의 발언으로 보나 매우 부적절한 로비스트 선정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국군포로가 입국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 15명이 입국을 한 걸로 아는데 왜 발표를 안 하시나요? 올해 들어 처음이고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국군포로와 그 가족까지 모두 15명이나 대거 입국을 했는데 발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군포로다 탈북자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15명 귀국한 것은 버마에서 추방된 탈북자들을 우리가 국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명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그 실적이 꽤 많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미얀마에서 열다섯 분 입국하신 것과 별개로 국군포로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해서 15명이면 굉장히 대규모로 입국을 했고 그분들을 발표를 하심으로써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국민들이 알권리도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탈북자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하고는 다르게 이번 정권 들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인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몽골이나 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탈북자 난민촌 건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먼저 탈북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신고된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민 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민감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용하게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박선영 위원님께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금년 초에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4개국에 업무차 가서 대사들이 일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임홍재 대사님, 태국의 정해문 대사, 캄보디아의 신현석 대사, 라오스의 박재현 대사 이 네 분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낀 바를 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휘를 잘해 주시고 또 잘 감독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서 KOICA 봉사단들 활동하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 새마을 운동하는 현장을 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 또 농촌 주민들이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성과를 향유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단에 앞으로 그런 사업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가 보니까 도로 공사, 병원, 학교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함으로 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친근도 이런 것이 3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을 봤을 때 그 단원들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젊고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지성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아주 좋게 보여 주는 데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와서 일했던 미국의 스티븐스 씨가 지금 대사로 와서 과거의 대사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봉사단원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발전해서 국제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단 총재님,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단원들이 거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귀국한 다음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알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

고, 둘째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활동에 대한 경력, 의사로 일한 사람들, 교사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뭐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숫자는 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봉사단 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그걸 알았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외교통상위원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지 보통 다른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원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봉사와 활동을 국민들에게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 나라 가 봤더니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제도화를 해서 일주일에 얼마씩 정상적으로 국내에 연결해 주고 있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추방 형식을 취해 주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령 가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쉰들러 리스트니 무슨 사운드 오브 뮤직, 남의 나라 얘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외교통상부가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를, 정책을 살려서 공개하지 않고 국제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한 생명은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동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분들의 생명을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내 식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여러 요로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중요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머지않아서 핵무기의 소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 미국하고 협의도 했고 미국의 다짐을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확실히 검증할 때까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꾸 대외적으로 논란하면 할수록 오히려 북한의 그런 심리전에 우리가 동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힐러리 국무장관이 오시는데 한미 FTA에 관한 것은 서로 조율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한미 FTA는 당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측에서는 조기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가 암묵적

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G20 차기 의장국으로 한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도 마련되어 있고요. 각 부처가 다 협의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예, 남경필입니다.

저도 칭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중요업무 현안보고 중에 중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5만t 조금 넘게 또 일본이 하지 않은 20만t, 앞으로 어떻게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2단계 종료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무하고 우리의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검증의정서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시하려면 조속히 6자회담을 개최해 가지고 서로의 이행방안을 좀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난민촌 설치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대국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제가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난민촌 설치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 외에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탈북자 이런 분들 본인들의 요구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난민 지위로서 정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이나 제삼국으로 가기 전에 적응훈련을 하는 개념의 단기적인, 예를 들면 적응 훈련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중유 문제를 언급했던 것은 지금 남북 간에 긴장 고조가 되어 있어서 국지전 가능성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공해 상에다가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꽃게잡이 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그럴 가능성이, 긴장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UN안보리 결의 1718호, 2006년 10월에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UN으로서도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 간에 핫라인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외교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저희가 바깥으로 해서 보기에는 1999년도에도 이런 국지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남북한 대화 채널과 군사 핫라인이 있던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확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때보다 그런 제어 장치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일단 국지전이 발발하게 되면……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은 그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인도라든가 이것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업체들은 한미 동맹관계가 건전하냐, 확고하냐 하는 데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조 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이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이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자기들이 계속 뭔가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을 경우에 그냥 일 저지르는 심정으로 만약에 도발을 할 경우에는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국익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의 동맹, 한미 간의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조치는 양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5일이 되면 우리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독트린을 제시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도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임태희 여당 정책위의장도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은 존중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긴장 국면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익, 한미동맹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출범 1주년 되는 2월 25일 전후로 해서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새로운 대북 독트린을 발표하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해외동포가 모국 은행에 달러 예금하는 운동, 해외동포단체들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좀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각 재외 총영사들한테도 그것을 잘 알리고 있고 일부에서 노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경우에 또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할 때 부작용의 하나로서 오죽이나 정부가 급하면 그러겠느냐 해서 또 의도치 않은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박상천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얘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했고……

○박상천 위원 실적은 좀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실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뉴욕, LA 총영사한테 제일 해당이 많은데……

○박상천 위원 그렇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 총영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아까 남경필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미사일보다는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이나 제3의 연평해전 이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만일 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북미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을 건드리는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북방한계선 침범은 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도 과거 99년, 그다음에 2002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왕자루이한테 한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공산당 연락부장 왕자루이 부장이 얼마 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한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것은 그런 침범이 일어나면 그것 갖고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 불안 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력 충돌도 있고 대단히 투자가 불안한지 아는데 왜 하필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하는데 한미 FTA 문제도 거론하실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한다, 3, 4월에 비준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왜냐면 비준하는 것은 서로 양국 간에 합의해서 일자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대미 교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비준해서 저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저희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논리도……

○박상천 위원 재협상이라는 말이 어폐가 좀 있지만 추가협상이나 뭐가 됐든 간에 또 한번 비준을 받아야 돼요,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비준해봤자 미국이 비준 안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서둘러 비준해 놓고 지금 미국 쪽에서 요컨대 거기에 대해서 조기 비준을 않고 그쪽에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니까 추가협상이나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복잡한 문제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기 비준이라고 하시는데 이것 벌써 작년, 재작년에 비준을 했었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바마가 들어서기 전에 작년 11월 4일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게 늦어져서……

○박상천 위원 그렇게 너무 여유 있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시간 제한 있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힐러리 국무장관도 재협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크리에이티브 서제스천(creative suggestion)이다 그랬습니다.

○박상천 위원 너무 빨리 비준해 놓으면 오바마 새 정부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서 재협상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 재협상하고 또 그것 비준받아야 돼요, 국회에서. 한국 국회의 비준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를 왜 반대해요? 피해대책 세우고 FTA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정부가 비공개리에 미국 새 행정부와 교섭을 좀 해 보시고 어떤 합의점에 이를 때, 합의를 확실하게 교환하고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이럴 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비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일부 가령 추가협상이 붙은 한미 FTA 협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속합의서가 붙든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미국 쪽 의견을 다 수렴한 것이니까 우리가 선비준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전 언론이 미국이 그런 쪽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다 보도하고 있을 뿐더러 미국이 지금 자동차회사 빅3가 위기에 처해서 막대한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한국 차만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그런 한미 FTA를 금방 비준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형식이 재협상이 안 되더라도 추가협정이랄지 부속합의서 이런 식

으로 해서라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 지금도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외통위도 싸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하기 곤란하면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쓸데없는 것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국회 여야 간에 분쟁만 일으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그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7년 12월에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재건 지원을 위해서 의료·교육훈련 팀 24명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비교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 직업교육 훈련, 경찰장비 지원, 이런 비정치적 파병은……

○박상천 위원 파병 요청 같은 것이 오면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하려고 그럽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그런 쪽에 더 비교우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한미 FTA 부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직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리고 또 국제적인 계약을 전 정부가 한 것을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安商守 委員 그렇지요, 국제적인 신뢰에 관한 문제이고 미국의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또 우리가 미리 한미 FTA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사실 오바마의 경우에도 재협상을 하자는 말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바마 입장을 강화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작년에 통과를 시켰으면 우리의 입지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해 놓고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安商守 委員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미국과 어떤 협의를 다시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래서 진작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을 건데 우리 박상천 위원님도 통과 안 시켜주겠다고 자꾸 저러시고 우리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저러니까 참 걱정인데 빨리 좀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정당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설득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FTA 홍보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지금 무역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은 FTA 이것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도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FTA 체결이 가능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인도하고는 어저께 협상을 타결해서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것을 발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EU하고도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 3개월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2, 3개월 내에 빨리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등 약 48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이것 좀 박차를 가해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우리가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도 한편으로 많이 드는 게 이것은 당연히 참정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국론 분열이 엄청나고 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부작용이 많은데 동포사회에서 역시 그런 갈등, 분열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문제를 풀어나갈 복안이 있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포사회의 분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우리 정치권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물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만 특히 지금 각 재외공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갈등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선거법 위반 등 이런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일부 거기에 우려를 하는 동포 지도자 분도 많고 그 분들의 얘기는 정치권에서 각 당에서 해외에 지부를 설치하고 하는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각 정당별로 활동을, 지부를 설치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매우 우려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安商守 委員 재외동포 선거는 결국은 공관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럼 공관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외교부의 경우에 대사나 공사 또 영사들의 고유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벅찬데 이 업무까지 맡겨서 그 업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국회와도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예, 내가 봐도 지금 통상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 업무도 봐야 되는데 또 선거 업무까지 맡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해외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또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봉급도 결과적으로 줄어버린 그런 결론에다가 또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또 여기다가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해외 동포에게 부여한 선거권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투표율도 올려야 되는 업무도 해야 되는 그런 중앙선관위의 업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예, 윤상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우리가 FTA를 비준을 했다가 미국 측에서 다시 추가협의 요구가 오면 다시 비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러한 재협상이 없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만약에 미국 측하고 추가협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 같이 어떤 사이드 레터를 서로 교환한다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시점에서 그런 방법론까지 얘기하는 데는 조금 앞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 위원 지금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오히려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지 우리가 미국 시장에 나가는 데 도움도 물론 되겠지만 균형이 잘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자 간에 만나서 협의를 해 보면……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샌더 레빈(Sander Levin)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샌더 레빈이 한번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는 리니고시에이티드(renegotiated) 해야 된다, 재협상 돼야 된다, 'KORUS FTA should be renegotiated' 이런 식의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가협의, 추가협의 얘기하지만 갈수록 'renegoti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자꾸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비준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오바마 행정부도 FTA를 비준합니다. 어차피 비준할 거라면 우리가 빨리 비준해서 추가협의가 들어오더라도 먼저 유리한 협상 고지에 서는 게 낫지 저쪽이 추가협의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서 늦추는 게 좋다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최근에 미국 측에서 나오는 북한 핵보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미국 측 입장이 개연성은 있지마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미국 측 입장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느 용어를 쓰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고서나 말을 할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한 여섯 가지 상황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2월에 미 합동군사령부에서 2008년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소위 말해서 핵보유국으로 명시했지요. 그때 장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것 미국 측 실수다, 수정하게끔 하겠다 말씀하셨지요. 그것 수정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윤상현 위원 아직까지 수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 2025' 정보보고서에도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시 대선후보가 8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09년 1, 2월 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언 파네타(Leon Panetta)가 2월 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2006년에 핵무기(nuclear weapon)를, 핵실험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월터 샤프(Walter Sharp)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또 핵실험을 했다, 여섯 개나 이렇게 수많은 데에서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핵보유국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측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물어보시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냐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윤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말할 때 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하고는 하늘하고 땅과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윤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은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팩트로서, 사실로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요,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진의가 뭔지 확실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정책이 바뀌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재앙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핵무기라는 것은 비대칭적 군사전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손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간의 조율이 어떤 때보다도 핵보유국, 핵보유 이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북한 핵보유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은 전혀 괴리가 없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현재까지는 괴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간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까지 지적을 한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확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미국이 절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비확산에만 신경을 쓰고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묵인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윤상현 위원 예, 묵인은 못 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냐는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미 간에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미국이 결국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비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외교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부하고 부처 간에 북한의 실체적인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국가안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미국이 지금 보고를 하고 또는 보도를 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 9월달에 미 국방부의 핵무기관리 리뷰 태스크포스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시스템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하는 보고가 됐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보도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꼭 그 보고서를 저는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2008년 11월 25일 미 국방부 산하 합동사령부 연례보고서 2008년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 인도를 명기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2008년 11월달에 미 국가정보위가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츠(Nuclear Weapon States)로 표기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09년 1/2월 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언급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미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인 리언 파네타가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지요.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정통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 핵무기를 그래서 검증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박주선 위원 이런 보고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박주선 위원 어허, 국방장관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보고서에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 국가라고 명기가 돼 있고 그런 것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보고서가 틀렸다는 건지 이 정보력이 잘못돼 가지고 오판한 결과에서 나온 보고라든지 이렇게 좀 명백히 해 가지고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하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은 지금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 겁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논리이십니까 아니면……

○박주선 위원 누가 하자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핵 보유를 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미국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 대북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6자회담 문제, 앞으로 한미 동맹 문제 모든 것의 틀이 전부 바뀌져야 되고 내용이 바뀌져야 되고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외교 정책을 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표현을 어떻게 쓰건 간에 그것의 판단이 되는 기초정보는 미국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검증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면 미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핵무기가 있지도 않은데 상원에다 보고를 하면서, 또 정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인준청문회에 나가서 북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영어를 그대로 보시면은……

○박주선 위원 원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있습니다. 뉴클리어 웨펀을 테스트 했다, 핵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핵무기인지 아닌지……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뉴클리어 웨펀을 테스트 했다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5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명기를 한 사실은 그것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용어를 쓴 사람들이 과학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그만큼 추출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서 쓴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싶다는 심경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하고는 분명히 구별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전제해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전제해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묻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국 정부는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증을 하기 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2월호 포린 어페어스에서 이야기한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라고 한 부분도

틀린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북한이 여러 개……

○박주선 위원 아니, 내가 게이츠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게이츠 장관이 이걸 틀리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틀리게 얘기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장관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확실하게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장관님, 여기는 외교무대에 가서 쓰는 외교용어를 가지고 하는 국회 답변이 아니고 여기서는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서로 정책을 토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의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하려는 지혜를 모으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시간 지금 다 보내 버렸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안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 정부, 지금 발언한 사람들하고 전부 다 만났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거나 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전제로 저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1992년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한미 간에 공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미국을 100% 신뢰를 하고 믿고 있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양국의 국익이 충돌한다든지 특히나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졌느냐 여부를 지금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답변이 동떨어져 버리니까 질의 시간이 없어서 묻지도 못하겠어요.

이번에 힐러리 장관이 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다면 6자회담 문제가 기본적인 틀도 바꿔야 되고 내용도 바꿔야 되고 대북 정책 내용도 바꿔야 되고 한미동맹 관계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된 거냐고 확실히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박주선 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세웠다 한다면 그동안에 6자회담을 진행한 내용이라든지 진전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한 내용인데요. 구 소련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 항일투쟁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조국을 떠났던 고려인 동포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구 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아서 지금도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무국적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다시 얘기하지만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단속에 쫓겨 병원도 못 가거나 진학과 취업 길도 막혀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

로 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제가 작년에 하나 낸 일이 있는데 이거 혹시 장관님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내용은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하나 주시면……

○이범관 위원 장관님 안 보셔도 좋고요, 실무자들이 좀 참고해서 봐서 대책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외통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국적자가 전부 5만 명이고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무국적자가 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그런데 왜 실제 외통부의 공식 추산자료하고 언론보도 내용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마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있고요, 또 이게 센서스(census)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또 현지 고려인들의 자체 통계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쨌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실태파악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떤 연유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외교통상부 영사교민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50만 불을 지원을 했고 또 러시아 대사관에도 40만 불 그리고……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전담 직원은 있습니까? 그것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꼭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라기보다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특별히 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 좀 추적을 하려고 하니까 전담 직원이 성의껏 이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통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적을 보면 작년 8월 15일 현재 외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적취득지원사업에 34만 달러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0명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고려인 자녀들이 국적 취득한 것은 9명이고 본인이 취득한 것은 10명이고 영주권 취득한 것은 27명 해서 총 46명이 법률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 비용에 비해서 미미한 실적이고 2만 명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국적을 취득하려면 2000달러에서 7000달러가량 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고려인들의 2~3년간의 연수입을 합친 금액에 달하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확보사업은 무국적 고려인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갈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무국적 상태인데, 노출이 되는데 경제적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떠십니까? 고려인들이 자기들이 들쥐 같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지 인터뷰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현지 고려인협회하고 대사관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요. 저희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에 또 동포지원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범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결국은 좀더 예산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국적 취득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바로 지금 장관님이 파악하신 게 아주 잘 파악이 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 차원의 외교 교섭을 좀 해 주셨으면, 소위 말하자면 잘 아시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체류 자격 주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알아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22일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목의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스페인이나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도 일괄적으로 정부 교섭에 의해서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편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러시아나 구소련 지역 국가들과 외교 교섭을 하셔 가지고, 국적 취득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우선 체류 자격을 좀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단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좀 특별히 교섭을 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좀 특별히 해서 정말, 장관님이 저나 마찬가지 심정이실 텐데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냉전시대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국적회복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 실적하고 결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자세한 자료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국정원장 청문회하고 두 가지를 한번에 한다고 이석이 잦아서 위원장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KOICA의 박 총재님에게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KOICA가 국제사회의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리고 아주 저개발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에 가장 호의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 KOICA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정의화 위원 아니, 총재님 개인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베트남입니다.

○정의화 위원 베트남으로 봅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 같아요. 베트남은 일단은 공산·사회주의 국가고요, 캄보디아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총선도 하고, 물론 국왕제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임프레시브(impressive)했다 그럴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이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KOICA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그러니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또 뭔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면 라오스·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을 생각한다면 제가 봐서는 캄보디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

고 싶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물론 시아누크가 김일성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쪽에도 뭔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역시 에이즈라든지 모성 프러덕티브(productive), 그러니까 생산에 관계되는 여러 질환들, 애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가서 보기에는 한국동란 직후의 대한민국의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가면 우리가 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면서 캄보디아를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겠다, 특히 캄보디아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나 KOICA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지금 주요 추진계획이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를 맨 먼저 세워 놨는데 이 보건의료가 접근하는 데 가장 제일이다, 우리 편을 만드는 데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데는 역시 보건의료 이상 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병원 만들기 운동을 좀 해 보자, 그 병원이 무슨 거창한 병원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삼사십년 전의 군 보건소 또 면 보건지소 수준, 예를 들어서 씨엠립에다가 군 보건소 정도 수준으로 한 500평 정도 되는 센터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보건지소 수준의 것을, 특히 에이즈나 모성 질환이나 소아 질환이 많은 그쪽에다가 몇 군데만 만들어 줘도 굉장히 좋은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재단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하면 저도 사비도 좀 대든지 하고 싶은 정도로 충동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 장관님, 지금 교육원은 교육부에서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이번에 제가 호치민에 가 봤는데요. 거기 가서 대담을 해 보니까 베트남이 길쭉한 나라인데, 주로 호치민 쪽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아무래도 하노이보다는 그쪽이 더 많은데 이번에 가니까 문화원도 옮겨 버리고, 모든 게 그리로 가니까 물론 대사관이야 당연히 옮기는 거고…… 호치민에 실질적으로 라이따이한이나 우리 기업이나 한국 사람이나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문화원도 교육원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거기에 문화원을 만들기 어렵다면, 제가 봐서는 문화원보다는 오히려 교육원 같아요. 그래서 라이따이한을 위시해서,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베트남의 여성들과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교육관을 꼭 좀 만들면 좋겠다,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서 한 나라에 문화관 만들면 그 나라에 교육관을 못 한다는 이런 아주 막힌 과거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떨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초이기 때문에 꼭 그 두 가지를 두 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통일외교의 1년이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명환 장관님과 저하고 인연은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슬픈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6년 동안 통외통위 하면서 그렇게 누누이 장관으로서의 리더십 이야기하고 우리 전 수교국가와 최소한 1인 공관 이상을 만들어 내고 우리 젊은 대학생 출신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국비 장학생을 보내서라도, 1년에 50만 원씩 대 주더라도 그 애들이 모르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1년이라도 한번 보내 보자,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올해 업무 계획에 다 쏙 빠져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뭐가 빠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 우리 공관을 설치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금년에 재외공관 증설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8개, 9개 정도……

○정의화 위원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대단히 높은 어른이 고집도 좀 부리고 동원도 하고 여기 전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문호 살리기도 좀 하고 뭘 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전혀 그것을 안 했다 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시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정의화 위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업무계획에 우리의 미래 목표는 뭐다, 미래에 우리 외교부가 지향하는 바는 뭐다 하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당장 올해에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아하, 장관님께서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한·중·일 통화 스와프 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독일이 1990년에 통일되면서 2+4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면, 우리도 지금은 2+4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한·중·일을 EU와 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자, 그 지향점이 10년 후에 달성이 될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지향점을 외교부가 가지고 한·중·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적극 넣어서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치면 통일에도 도움되고 모든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 협력 강화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외상회담, 정상회담, 그 외에 다른 회담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예, 유명환 장관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FTA 관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외교장관님의 생각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한미 FTA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 강한 입장을 갖고 지난번 FTA 때문에 국회 내에서 그리고 상당히 국론 분열적인 현상이 생긴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실관계 같은 것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 재협상이란 말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클린턴 국무장관이 의회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서면으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서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의 한미 FTA를 반대해 왔고 그리고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다, 컨티뉴즈 투 어포우즈(continues to oppose)…… 안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몇 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한국이 리인게이지 니고시에이션 할 용의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외교부에서 공개적으로 해석을 해낸 것이 '한국이 재협상하겠다면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할 용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쓰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외교부의 훌륭한 외교관들이 이런 스테이트먼트(statement)를 그렇게 해석하느냐……

물론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하고 관계없이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FTA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좀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상황, 미국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정확하게 보고 FTA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계라는 것이 '아, 우리는 지금 비준 끝냈다. 미국이 알아서 하든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한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것이 한미 관계이지…… 친구이고 동맹이라는 게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통상부가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국내에 정치적인 거센 바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센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이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보고 깃발을 제대로 딱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나 한미 관계를 위해서나 그리고 외교통상부를 위해서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장관님을 위시한 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오바마,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지만 귀가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리인게이지 니고시에이션(reengage negotiation)하고 리니고시에이션(renegotiation)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송민순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 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요.

○송민순 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송민순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사찰 이걸 전역으로 하자, 전역에 핵사찰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말이 보면 합리성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이 제 나름대로는 또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핵화, 한반도에서 동시사찰하고 검증절차 만들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1월 15일날 내놓은 논평하고 어제 주한미군사령관이 내놓은 것하고는 상당히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 이걸 갖다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사실 미국이 과거에도 해 온 입장은 6자회담 그 교섭 과정에서도 지금 검증을 위한 체계, 검증체계(verification regime)에 대한 협상장에 앉으면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거에 한미 간에 협의해 온 같은 라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우리는 다 이미 오픈돼 있고 남북한의 군사기지를 포함한, 핵시설을 포함해서 다 동시사찰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사실 북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핑계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세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고, 또 여기에 대한 발언 자체도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율을 해 가지고 북한이 볼 때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6자회담에 있어서 문제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치도 확보를 하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선전 공세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미 간의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한미 FTA 문제는 민주당으로서 성공시켜야 되고 발효를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클린턴 국무장관이 얘기한 'If Koreans are willing to reengage negotiations' 이 얘기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얘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 받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 캠페인 때 '왜 한국은 미국에 70만 대 가까이 파는데 미국 차는 5000대밖에 못 파느냐,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점유율로 보면 국내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미국 차가 일본에 팔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팔립니다. 이것은 퍼셉션(perception)이 잘못되고,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한미 간에 앉아서 '뭐가 문제가 어떻냐'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어떤 웨이 아웃(way out), 그 해결점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세금이 2.5%지만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8%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만 본다면, 그 규정만 본다면 오히려 미국 차가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한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너무 전문적인 것이지만 스냅백(Snapback) 조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서로 협의하다 보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소위 커머셜 비이클(commercial vehicle) 중에 픽업트럭의 관세가 25%나 되는, 미국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자동차 회사도 미국 시장만을 위해서 미국 픽업트럭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를 개발해서 들어가려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씩 놓고 한미 간에 협의하다 보면 서로 왜 그런, 퍼셉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그런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미국의, 얼마 전에 방문했던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도 '한미 FTA는 한국이 한국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서 먼저 비준을 하고 미국 측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측에서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한미 FTA의. 2007년도 그때 했을 때 빨리 했었어야 하는 건데, 또 작년도 시간을 놓쳤고 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FTA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 '지금 하느냐, 몇 달 후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전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그렇게 극한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통과를 시키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이걸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서 합의를 해서 다시 하자, 그 논리에 나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역 사찰 문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점차 미·북 간의 핵군축회담으로 끌고 나가서, 이 사찰 문제도 군축에 관련된 사찰 문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찰검증 문제가 나온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자기는 핵시설을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걸 사찰한다는 것이…… 신고도 안 한 걸 사찰할 게 없잖아. 우리가 6자회담에서 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신고도 안 하는 걸 뭘 사찰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순 위원 여기에 대한 답은 별로 없으니까 토론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쓸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문학진 이따가 보충질의 이용하시지요, 보충질의.

다음은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우선 제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라디오방송에서 들었습니다. 1차로 300명을 선발했고, 3월에 파견하는 것으로 나오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기에 1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대체로 맞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1차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1차 파견계획은 정

말 차질 없이 잘 추진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추진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선발이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17일날 시행공고를 했고, 지난달 초에 대학별로 자체 선발을 해서 지원자 602명 중에 면접을 통해서 1차로 325명의 선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단계는 스폰서 기관은 제일 큰 3개 기관을 정해 가지고 스폰서하고 이번에 지원자 325명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 2월 중에 이러한 스폰서하고의 연결고리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3월에 비자 및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3월 말, 4월 초에 어학연수기관으로 각각 출국하는 이런 타임 프레임(time frame)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미국이나 우리나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 가느라고 조금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낙균 위원 특히 그 학생들이 인턴취업에 아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인턴자리, 특별히 유급 인턴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경기 불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턴자리 확보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더 충분히 점검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애초 참가자의 20%를 저소득층에게 할당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인원이 다 안 찬 거 아닌가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해 가지고요, 그런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는 20%도 매우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마저 안 채워지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선발된 325명 정도의 대략적인 상황하고 참여비용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건데 경제 살리기 외교 중에 경제회생 및 국민생활 지원 사업의 조기 시행 안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한 수로 많이 확대하셔서 저는 매우 좋은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우려되는 건 이것이 홍보성이나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젊은이들이 매우 좌절하기 쉬운 이런 때에 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 대신 더 큰 좌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문학진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나는, 독도 문제 같은 건데요. 기본적인 8대 핵심과제 중의 5대 지속적인 과제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지면상 빠트린 건지 몰라도. 독도 영유권 또 동해 표기 오류 시정, 중국 동북공정 등 우리의 역사 왜곡과 영토에 대한 문제가 빠진 것,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중심 과제로 추진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빠진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신낙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시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보호무역 움직임에 관련해서도요, 오늘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전 세계가 경제불황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이런 조항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미 상원이 이러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조항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도 그 적용 제외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관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상원의 경기부양 패키지(package)에 미국이 국제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즉 WTO 규정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WTO 회

원국이기 때문에……

○신낙균 위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보고하신 내용의 방향이 조금 애매해서,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답을 명확히 하셔서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건데 장관님 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그러한 우려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혹시 워싱턴타임스 2월 4일날 제가 쓴 에더터리얼(editorial) 기사를 보셨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송영선 위원 'President Obama's best options with a North Korea'라는 것으로 나갈 방향을 제가 한 네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또 오늘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걸 거기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아직……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장관실에요?

○송영선 위원 당연히 보냈지요. 그런데 뭐 비교섭단체의 글이라서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좋은 글에 있어서는……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쯤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다시 꼭, 당장 읽어 보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글 쓴 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바로 알리고 떳떳이 대응하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지난 2월 2일에서 6일까지 워싱턴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실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동북아 정책을 한 사람들에게 인풋(in-put)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덧붙여 셀리그 해리슨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리슨이 1월 13일에서 17일 사이 북한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가 3주일 후에 2월 3일에서 7일 똑같이 나흘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갔다 온 결론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네 가지를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셀리그 해리슨은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한 겁니다.

첫째, 북한은 그들이 북핵 신고서에서 밝힌 30.8㎏, 이걸 67파운드라고도 표시하겠습니다만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이미 핵무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그다음 박의근 외무성장관, 그다음에 김영태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리춘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시에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한 핵 검증은 핵 폐기 단계에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폐기 단계에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핵 검증은 남측의 주한미군기지 핵과 남한 기지 핵 검증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핵 폐기하는 단계에서는, 핵을 폐기하면 경수로 2기 제공해라, 그리고 경수로가 건설돼서 운용될 때까지 에너지 공급도 책임져라……

마지막으로 북한 핵 폐기는, 이것은 비핵화가 아닙니다. 디스아머먼트(disarmament)입니다. 미국이 대북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단계별 그리고 액션 투 액션(action to action), 행동 대 행동으로 해 나갈 것이다……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의 보고가 셀리그 해리슨의 보고와 차이가 나는 것은 셀리그 해리슨 보고에는 추가적인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했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 60명이 앉은 데서도 얘기했는데, 북한이 직접 미국에 대해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미국 수교를 먼저 하고 비핵화를 하자, 두 번째 미국의 대북 위협 정책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그리고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북한 핵 포기 절대 안 하겠다, 해리슨이 대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외무성 미국국장 리근, 박의근 외무성장관, 김영태 최고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 리춘복 국방위원회 대변인입니다.

문제는 아까 뭐 여러 위원들이 6개 소스(source), 7개 소스 해서 미국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문태영 대변인은 2월 6일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이때까지 혼용해 왔다. 둘째, 핵무기는 핵장치를 운반차에 장착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한미 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정말 지나친 표현으로 하면 말장난입니다.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프랑스도 러시아도 모두 최초에 수중 핵실험이나 지하 핵실험을 했지 완전히 운반차에 실어다 날라서 핵실험을 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굳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번복하고 애매모호하게 해 왔던 태도를 벗어나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정부로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면 아까 장관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군비통제 요구에서 우리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수에 우리가 안 말려드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제 핵 불능화가 아니라 핵 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디스아머먼트에 대한 우리나 주변국의 부담과 보상이 엄청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폐기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핵 검증까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외교부나 다른 부서가 핵무기 국가가 아니고 핵장치 폭발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세상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우리의 피땀과 세금으로 개발해 놓은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안 없앱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변국에게 온갖 수단과 위협을 동원해 개방정책을 전혀 안 쓰면서 경제적 지원 뜯어내는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체제 보장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외교부에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북한 위협 확실히 알리자, 북한 실체 확실히 알리자, 지금처럼 benign neglect인 무시전략이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과 의도를 국민 4700만에게 아주 소상하게 알리고 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하는지, 또 10·4 선언 내용을 무조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없는지, 북한이 하는 요구가 어거지라는 것을 주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저는 애매모호 정책보다는, 전략적 애매모호성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장관님이 걱정하는 것을 북측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수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우리도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기를 다 하자는 거예요. 하고,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다, 솔직하면 할수록 이중 술수에 속는다, 주면 줄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간청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우리 송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워스트 시나리오(worst scenario)를 항상 가정해서 안보태세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정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고 그 전제하에 준비를 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송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이유 플러스……

○송영선 위원 세 가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세 가지 플러스 해 가지고, 우선 법적으로 그렇게 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도·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지만 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미·북 양자 간의 문제로 끌고 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제외시키고 우리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적화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쉽게 미·북 간에 평화협정 한다 그러는데 그것 뭐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질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이브(naive)한 생각이냐 하면 북한은 6·25를 한국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인민해방전쟁론을 얘기해 가면서 미국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도 미국하고 해야 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

기도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핵보유국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북 간의 군축협상을 해서 해야 할 것이지 왜 한국 정부가, 남한이 여기에 끼어드느냐, 협의할 상대조차 안 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송 위원님의 의견을 알지만서도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디까지나 그런 것을 전제해 가지고 그만큼 북한이 핵위협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좋다, 북한의 핵보유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자 하는 것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설명보다는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청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홍정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셨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20% 선발키로 했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325명 중에서 몇 명 선발됐습니까, 이번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7% 정도 나온 것으로, 15%……

○홍정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34명 아닙니까? 34명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1%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20% 못 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한 65명 정도 선발돼야 되는데 왜 34명밖에 선발이 안 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시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뽑을 수가 없겠지요.

○홍정욱 위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34명밖에 못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럴 겁니다.

○홍정욱 위원 비용에 대한 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그만큼 덜 지원했다라는 이유가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러니까 시범사업 저소득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 차상위 계층 및 상위……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20%를 선발키로 했고 또 저소득층……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목적이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홍정욱 위원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20%를 채우셔야 되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지원액을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외교부가 얼마 전에 올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부담액은 줄었지만 아직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액을 지원하거나 교육부와 상의해서 학자금 대출 같은 그런 방안을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제가 당장…… 이것은 지원자를 우선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정욱 위원 그래도 지원자를 받기 전에 외통부에서 20% 저소득층 뽑기로 했으니까 차상위 대학생들에게는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복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보고 때 알려 주십시오.

FTA에 대해서 오늘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

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FTA 성사를 위해서 정부가 접촉하고 있는 미국 의회 쪽 창구가 주로 어떤 쪽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미 대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 의회 쪽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미 대사는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득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시기에 비준이 되어야 되니까 미국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FTA 성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통부가 그동안 집토끼 전략으로 FTA를 전통적으로 찬성해 오신 분들 그리고 세입위원회같이 핵심인사 접촉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러나 의회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맨 투 맨 로비 그리고 로비스트, 싱크탱크 같이 바닥 훑기 이 두 가지가 저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FTA가 통과 안 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큰 표차이로 통과된 적도 없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바닥 훑기와 맨 투 맨 로비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홍정욱 위원 오늘 박상천 위원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시 아프가니스탄이 논의가 될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올해 중에 중요한 외교 및 국정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장관님도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의료, 직업훈련, 경찰지원장비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파병 여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공식적 요청이 없었다고 하지만 공식적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기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덮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덮고 가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덮고 열고 간에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2007년 12월 불행한 한국인 선교사 납치사건 이후에 동의·다산부대를 철군했고 또 불행하게도 그때 납치단체와의 어떤 약속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훈련, 의료지원 또 경찰장비지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여러 가지 고민하실 사항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익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맞닥트려야 할 질의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위한 견해를 밝히셨고 공감대를 얻는 듯하다가 이것이 관철되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G8을 G20로 바꿔야 한다 혹은 G20가 너무 많기 때문에 G15, G16으로 가야 한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국제 거버넌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G20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G20가 공식적인 국제 거버넌스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물밑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이미 G20

는 재무장관회의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이 뿌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공감대가 이미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공감대를 넓혀 가는 노력을 하면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위원 시간이 끝났지만 G15이나 G16으로 갈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선영 위원 질의 과정에서 가만히 듣다 궁금증이 발동해서 다시 왔습니다.

박선영 위원이 최근에 국군포로가 포함된 탈북자들이 귀환을 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준다, 국군포로 포함 여부를 아까 박선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문일답 듣고 참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여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군포로 안전 문제라든가 또 관계국 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정진석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많은 인원이……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군포로 송환 문제, 납북자 송환 문제 주무 부처는 통일부하고 외교통상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개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교공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국군포로 문제는 원래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외교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서는 통일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정진석 위원 어쨌든 지난 10년 정부 동안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문제에 좀더 정성을 기울이면서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 누가 뭘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등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난 정부에 비해서 좀더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미국같은 경우에 JPAC이라고 합니까? 전쟁포로확인사령부 앞에 써 있는 문구 혹시 기억나세요? ‘Until they are home.’ ‘You are not forgotten.’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부가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죽은 이후에도 예우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다. 서해교전은 전투, 전쟁이거든요. 전사자 추모식에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광경을 보고, 대통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된 사실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진석 위원 이와 관련된 질의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있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많은 걱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 최초 선거가 2012년 4월에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진석 위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최초 투표가 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부터 해당될 수도, 국내에 와서 자기가 신고할 경우 투표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바로 있을 경기도 교육감 선거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본인이 들어와서 귀국해서 신고를 할 경우……

○정진석 위원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외교부가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재외국민정책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 있잖아요? LA나 뉴욕 이런 데는 벌써 한나라당 책임자, 민주당 책임자가 설치고 다닌답니다. 이것 참 큰일났어요. 무슨 교민대표 뽑는 선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역 현실인데 이것 크게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투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투표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런 대비가 없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표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것 때문에 외교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진석 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별로 없어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이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며칠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서는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 아마 시행하기에……

○정진석 위원 구상하고 계신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내 주세요. 어떤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별말씀을요.

○구상찬 위원 서울시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황진하 위원 또 정옥임 위원 저 이렇게 세 명이 무역협회에서 FTA 관련 조기 비준을 도와달라는 청원을 받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질의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FTA가 저희들은 먼 미래,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한테는 미래일지 모르지만 FTA는 생존이다.' 이런 얘기를 여성 CEO가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정말 FTA를 생존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요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위원님들이 북한 핵 문제, 특히 CIA 국장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관께서 많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장관 답변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다 읽어 보고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구상찬 위원 어저께 김학송 의원께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레드라인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장관께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구상찬 위원 외교부장관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홈페이지에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이 올린 레드라인에 관한 것을 한번 장관님께 보여드리도록 하십시오.

'2006년 북핵 실험 직후에 당시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가 찾아와서 북핵을 용납지 않겠다는 미국의 레드라인이 북핵이 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이전을 불용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아무도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추적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IA 국장이 핵무기 폭발을 뭐 했다, 핵장치 폭발실험으로 규정해 왔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아까 오후에 다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외교통상부에서 그동안 한미 간 협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에 촉구해 두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이는 없다 이렇게 장관께서 늘 말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미국 내에서는 자꾸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들이 축적되고 이러면 결국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한 발 한 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한미 간에 이런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장관께서 늘 여기 와서 답변하시기를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으로서 북한이 이를 어겼을 때 즉각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핵 6자회담은 존재이유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북한 주장대로 비핵화 회담 대신에 한미 군사회담이라든지 군축회담 이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발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한미 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외통위 와서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잘되고 있는지, 지금 나타난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국내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될 때마다 또 그 이전에도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오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북 간의 군축협상은 말이 안 되는 소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워싱턴에서 어느 기자가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미국이 확산만을 목적으로 세우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확신이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자꾸 용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점도 미 측에 지적을 할 때마다 미 측은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 오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시는데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한 발, 크게 뛰지도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씩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장관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이 없도록 새로운 국무장관과, 새로운 국무장관은 특별히 파워풀한 입장에 있고 장관께서도 오랫동안 장관직에,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두 외무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오시면 철저한 대비 또 이런 누수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국제협력단 계시지요?

이것은 국제협력단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격려 말씀, 격려 질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 두 달 전에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과 함께 모로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해외봉사단 여학생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갔던 의원들끼리 트럭을 타고 5시간을 달려 들어가서 해외봉사단의 서강대 출신 여학생을 한 명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시골마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국제협력단 단원들이, 여학생 한 명이 모로코 시골에 가서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 친구는 가서 뭘 가르치느냐? 컴퓨터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하여튼 협력

단 단원들이 오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계획 이것은 아주 좋은 운동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여러 가지 질의하신 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전인 작년도 8월 21일 상원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대북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서 수년간 동맹 관계가 표류했다.'

어드리프트(adrif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때부터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인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 당시의 대북정책하고 큰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원칙에는 철저하면서도 방법, 수단에 있어서는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적대국가 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다고 원칙을 무너뜨려 가면서 어떤 협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란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한미동맹을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항상 우리 국내 여론이든지 정치권에서도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국가 순방을 하면서 일본에 들러서 미일관계를 일종의 린치핀(linchpin)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고 한국은 그보다 못한 세컨더리의 동맹관계처럼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외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 없겠지요.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에 있어서 일본을 보는 미국사람의 인식하고 우리를 보는 것하고의 차이를 현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소위 일본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 또 패싱이 나오는 만큼 한미 관계에 대한 애착도 크고 애정도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시대에 따라서 업 앤드 다운(Up & Down)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미국도 노력을 함으로써 그런 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국민정서 쪽에는 옛날 카스라·태프트 조약이라든지 에치슨 라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은 미국 전략 수행상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은 그만 못한 것 같다, 한미동맹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는 일본은 동맹으로 계속 붙잡지만 한국은 그보다 중요도면에서 낮은 것처럼 할 가능성 때문에, 과거 역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노력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이것은 국민의 인식이 다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맹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어쨌든 새로운 미국의 정부의 등장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아니면 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외교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또 추진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축이라는 점을 이 정부 초기에서부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요.

지난 1월 21일날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 아젠다에 보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양자협정, 비정기 정상회담, 6자회담과 같은 임시적 협의체를 넘어서 좀더 효과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틀, 더 효과적인 틀 이것은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동맹관계의 틀을 중시한다는 것하고 또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 호혜적인 것을 중요시 한다 또 더 나아가서 다자적인 접근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한·미·일의 협력관계 이런 것도 중요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면서 또 지난 1월 27일날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무브리핑을 할 때 참석한 기자들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북한 핵을 다루는 데 있어서 6자회담을 북한 핵을 다루는 하나의 수단,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는 식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고 어떻게 협조가 되거나 지금 서로 협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뭐 특별히 뭘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우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한미 FTA 문제가 지난 12월달에 상정하는 절차 속에서 참 국민들께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은 한미 FTA의 국내 비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국이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려고 한다면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요? 구두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의회 청문회를 할 때 내놓은 문서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답변자료 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온 것은 "If South Koreans are willing to reengage"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장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확실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협상의 신호탄이냐 아니냐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미 측이 협정문에 어느 조항이 어떻게 돼서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한미 FTA가 불공정한 것 같다. 왜 미국은 한국에 5000대밖에 못 파는데 한국은 70만 대를 파느냐 하는 이게 하나의 퍼셉션(perception)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꾸 재협상이냐 아니냐 추가협상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에 맞으면 우리가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얘기를 해서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한미 동맹관계는 튼튼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지난번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FTA를 상정하는 그날 장관은 어디 계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같이 대기하고 계셨지만 그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못 들어오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여기 접근이 안 돼 가지고 1층에 협력관 추종연 국장 방에서 대기하고 CCTV로 보고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아서 못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접근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신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접근이 안 됐습니다.

○鄭玉任 委員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의 서면답변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잘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인게이지 니고시에이션이라는 말하고요, 리니고시에이트(renegotiate)라는 말이 같은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르지요.

○鄭玉任 委員 다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미국 측의 전문가가, 제가 누구라고는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 청문회에서 그것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재협상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바마 행정부는 재협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경선 때 가장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FTA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할 수 없어서 그랬으니 양해해 달라는 말을 대사관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뭐 제가 확인하는 게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저……

○鄭玉任 委員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이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아프간에 파병한 나라가 모두 몇 나라나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EU국가들은 대부분 파병을 했습니다. 30개 국가 좀 넘습니다.

○鄭玉任 委員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없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병이 아닌 경찰 훈련요원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경찰 장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파병의 문제가 아닌 그런 지원요청을 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지원요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동안에 실사단도 파견하고 또 현지 여건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해 가지고 그 문제 우리 정부 부서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 미국의 대아프간 테러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파병도 아닌 이런 경찰 훈련요원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라크와는 분명히 달리 명분도 있는 그러한 아프간에 대한 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우리가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를 추구한다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명분이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유엔도 지금 적극적으로 아프간의 대테러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런던에서 G20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역시 미국 행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도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향후에 비확산 내지 반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우리 정치권에서도 하지만 미국 내의 일각에서도 이런 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바마 쇼크를 받는 것은 아닌지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도 안 되고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위치, 한미 동맹관계 또 미일 동맹관계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차제에 이러한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미 간에 그 정도의 조율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지역이라든지 이란에는 홀 브루크라든지 미첼이라든지, 데니스 로스 같은 거물들을 특사로 임명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기민한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요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커트 캠벨 아태차관보로서 임명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사를 임명하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공조를 해 나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은 당초에는 고위급의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하는 조정관이라고 그럴까 특사라 그럴까 이름은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 브루크나 미첼 전 상원의원 같은 그런 거물급을 지명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든가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임무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페리 특사가 그것을 맡아 가지고 페리 프로세스를 하다가 정권교체 때문에 그것이 끝났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북한 문제가 그만큼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요. 특히 국적은 다른 나라에 옮겼지만 현지 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주류로 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지난번에 버지니아 유권자연맹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지에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한글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을 지원해서 SAT에 한국과목이 거기에 정식화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줬고요. 그 이외에도 한인단체 자체에서 자구노력 또는 친목, 교류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장관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문학진 위원 작년 12월 18일 외통위 사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할 필요는 안 느끼고요. 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날 국회 오셨다가 회의장에 접근도 못 하시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위원들을 제외한 다른 당 위원들도 회의장에 한 발짝도 못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고, 저도 민주당 간사로서 1월 8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과 존경하는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아까 송민순 위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미국의 로비업체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Parven Pomper Strategies)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름이 복잡해서 저도 다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약자가 PPS네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12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한미 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 또 오바마 정부 및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미국 동향 파악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관련 자문회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네요.

최근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 회사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까,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주미대사관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필요시마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회사를 수시로 고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업 투 데이트(up to date)하게, 그렇게 금방금방 파악이 아마 잘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회사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주미대사관이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슨 거래, 뭐 이렇게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주미대사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

○문학진 위원 자체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이 회사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주미대사관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주미대사관하고 그 회사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건 입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 회사로부터 뭐를 자문 받았는지 그 자문 받은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럼요.

○문학진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 외교통상부장관님인 송민순 현 민주당 국회의원님과 현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님의 견해가 상당부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항상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물론 재협상·추가협상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입장은 2월 국회 처리도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요, 외교통상부가 그렇게 조기에 가급적 빨리 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과연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그리고 미국 상황과 관련해서 그게 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유명환 장관님의 아까 답변 내용에 썩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아까 '조기'라고 자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조기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하나의 전술·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국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 한미 FTA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이 FTA 이것은 불필요한 거니까 죽이자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

○문학진 위원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상천 위원님이 분명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했지요. 민주당은 '한미 FTA를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의 문제다' 그런 얘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7대, 지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7때 국회에서부터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외통위에서 했고 특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다른 이유로서 이것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솔직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느냐, 좀 나중에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여야 간의 정치적인 싸움의 문제냐, 저는 그것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학진 위원 제가 아까 여야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부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야가 작년 12월에 그렇게 극한으로 대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마 송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송영선 위원 계속합시다.

○위원장 박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월에 국정감사할 때 제가 내년이 한일합방 100주년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물었을 때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우선 추진과제도 없고 지속 추진과제도 없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지금 실무선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방한하게 되는, 아마 오늘 밤에 오게 되는 나카소네 일본 외상하고도 그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생각입니다마는……

○박선영 위원 그런데 나카소네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해외독립운동 사적지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해외독립…… 보훈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보훈처가 무슨 돈이 있나요? 예산이 있나요, 인력이 있나요? 보훈처에 맡겨놓을 수 있나요? 해외독립운동 사적지는요,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세계성·보편성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각 공관마다의 문화홍보담당관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청사 얼마나 옹색하고 낙후되어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광복군 주둔지는 지금 디스코장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렸거나……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타운홀이나 필라델피아의 리틀극장, 그다음에 동경의 2·8독립선언기념비, 그것 외에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간도 등지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얼이 녹아 있는 그곳, 우리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빨리 외교부가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응집을 시켜서 일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할린 한인영주귀국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지금 그쪽에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현재……

○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말 현재 3만 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하고 협조해서 97년부터 1차 사업 마무리 지으셨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올해 또 몇 분 들어오실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일본하고 협조하게 된 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일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연차적으로……
○박선영 위원 공식적인 협정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합의를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공식적인 협정문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협정문은 아니고 합의사항입니다.
○박선영 위원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가 누구를 만나서 약속을 했는지 대외비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이메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의 국장급 직원이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일본 외무성이 받아들였다는 답변을 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렁뱅이입니까? 정부 간의 협정도 없이 일본, 국장급 외교부 직원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모셔 옵니까? 국가의 품격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강제징용할 당시에 그분들이 가입했던 우편저금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숫자는 정확히……
○박선영 위원 59만 구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 모셔 가면서 현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강제로 은행 구좌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돈 넣어줬습니다.

액면가 얼마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억 7200만 엔입니다.
○박선영 위원 1억 7200만 엔인데요. 1946년도에 쌀 한 가마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해방 이후에 인플레가 폭등을 했는데도 3원 86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쌀 한 가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200배가 뛰었습니다. 20만 원돈 합니다. 우리 쌀값 억제시켰는데도 그래요.

그 돈이요, 피 맺힌 돈이고 한 맺힌 돈이고 그리고 단장의 아픔을 겪은 돈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 상당수가 돌아가신 건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통장을 지금까지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소송해서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뭔가요? 국가의 책무가 뭔가요? 우리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한일합방 100주년, 그리고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한 지 100주년입니다. 보다 당당하고, 거렁뱅이로 일본한테 뭘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서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할린 한인영주귀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임시국회 때 또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지금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부가 1997년부터 몇 년간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람과 현지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을 다 접촉해 가지고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귀국시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3만여 명 중의 대부분은 현지에 잔류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아직 상당한 부분은,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전원 귀국시킨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세, 3세들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요, 납치당한 자식 같은 분들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홀대하고 내팽개치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의 보다 깊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저도 FTA 문제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게 참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위원 제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미 FTA 문안대로 비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민주당은 현재 있는 그대로 바로 동의를 하겠다, 비준동의 하겠다는 게 입장이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이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즉시 아무리 늦어도 1개월 내에 민주당은 비준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외교통상부가 볼 때 이대로 비준될 것 같다라는 판단만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불식시키는 데, 이런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바로 큰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외교통상부에서 유념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가 지금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지금 밝힌 것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지난번 사태가 있기 전에 밝힌 바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북한의 남북 동시 사찰 이 문제는 군축회담을 갖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 한국이 좀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92년 비핵화공동선언에 이 문제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또 그것이 원용이 돼 가지고 지난번 2005년 9·19성명에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 달라는 그러한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혹시 앞으로 이것 할 때, 아프간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다시 지적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명환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지난번 아프간 납치단체들에게 우리가 동의·다산 부대를 07년 12월까지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말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한 해 전에 2006년 12월 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더 잔류하는 대신에 동의·다산 부대는 2007년 12월까지 철수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간 사태가 생겨서 제가 거기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2007년 12월까지 이것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다시 리어펌(reaffirm)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납치범들의 요구에 굴해서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외교의 얼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제가 전에도 우리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면질의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제대로 잘 오지 않습디다. 아무래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우리가 이번에 전략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또 호주나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 동맹에다가 앞에 어떤 캐릭터라이즈(characterize)하는, 무슨 전략동맹이다, 무슨 무슨 동맹이다 이렇게 붙이는 사례들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하고 이런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일 협의, 한·중·일 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젠다에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미·일 협의, 한·중·일 협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협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니까 어젠다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젠다가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점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랍 소사이어티(Arab Society), 지금 우리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또 아랍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단기·장기 계획, 아랍 소사이어티 발전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훈련된 고위, 자질이 있는 외교관들이 조기 퇴진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특임공관장의 현재 보임 현황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고위 외교관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서 외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를 짜는 데 대해서 의견을 좀 교환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장관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 2006년 4월 이후에 우리 선박의 선원 피랍 사례가 현재까지 여섯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해적 대책법을 만들면 정부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은 자위대 파견하는 해적 대책법을 냈습니다. 올해 만들었어요. 95년부터 제가 PKO법을 고민을 해서 냈는데 아직까지 제 위치가 이래서인지 통과가 안 됩니다. 정부가 답답하다고 난리를 쳐 놔 놓고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원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해적 대책법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99년에 대테러법을 만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우리는 아직 대테러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회에서 정치 분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입법으로 해 가지고 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늦게나마 1월 20일 문무대왕함을 보내기로 하고 또 파병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해적 대책법 '하십시오' 해 놓고, 또 PKO법처럼 외통부가 급할 때만 '빨리 하십시오' 해 놓고 지금 계속 일파만파 늘어지고 안 되는 것 정말 답답한 게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또 관련돼서 작년에 해외긴급구호 지원 예산을 긴급하게 만들었어요, 2억 원으로. 그런데 우리가 소말리아 두 차례 정부 합동실사 다녀왔는데 여기서 예산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2억 갖고는,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턱도 없는 돈이다. 그때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을 원초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한 단순하게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나가면 미국 제5함대 사령부에 예속이 돼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니까 몇 명 간단히 보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역시 일종의 PKO 차원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인 법을 먼저 만들고 또……

일본 보십시오. 헌법에서 어긋나는 걸 완전히 부속조항으로 붙여서 자위대 법을 계속 익스텐션(extension)하면서까지도 해 나갈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국익이 관련되는 데는 야권·여권이 없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지금 이런 문제들에 자꾸 치우쳐 있으니까 정부가 이럴 때는 이니쉬에이트(initiate)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PKO법은 현재 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국적군 파견은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건 다 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인데, 이건 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면 가장 먼저 제안할 문제 중에 공개화되든 비공개화되든 분명히 이걸 던집니다. 그래서 막 안 가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 무서워서 전에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딸을 야반도주를 시켰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야반도주시켰지 않습니까, 7월달에?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갖고 갈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께서는 경찰이나 특수부대 치안이 파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연하게 우리의, 특수부대 치안병력이 이게 파병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간 같은 데 특수부대 치안요원으로 보내는 것은 북한과 어떤 지형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간접적인 전쟁이나 평화유지 활동 참여로서 아주 필요한, 긴요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있고 민감하니까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교육부대, 수송부대, 공병부대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역시 아까처럼 저는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외교통상부가 매를 맞아야 됩니다. 국방부도 매를 맞아야 됩니다. 야권·여권 또 분열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줄 것 먼저 얘기해서 다른 거라도 미국 쪽에 좀 크게 받아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외교부장관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별 말씀을……

○구상찬 위원 장관께서 이제 좀 쉬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쉬프(chief)들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아까 해외봉사단의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구상찬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임 이사장님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그 뒤에 추적해서 한국학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한국학 발전 상황을 보면 역시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지원했던 북미 지역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또 독일·불란서 쪽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국가별로 좀 차별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지역에도 지난 한류의 현상, 또 현지에 우리 투자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학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해서 국립대학을 보니까 지금 2년차로 한국어학과를 설치를 했는데 교수가 부족해서 40명을 선발을 했는데 12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그 외 러시아·CIS·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좀 차별화한 그런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UCLA하고 UC 리버사이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리고 에너지 외교 때문에 한·아프리카 정상포럼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포럼, 예산의 50%가 넘는 23억 원인가로 책정되어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구상찬 위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이따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또 경제포럼 형식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구상찬 위원 국제교류재단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꼭 성공시키도록 우리 임 이사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서면답변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투표권 부여와 함께 우리 동포의 권익 신장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구상찬 위원 특히 미국과 같이 국회 정치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시에 우리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정진석 위원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투표권이 오히려 동포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 갈등을 유발할 예정이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투표권이 재외동포들한테도 넘어감에 따라 무슨 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해서 동포 간에 막 서로 반목과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런 것을 잘 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우리 한국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과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늘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외동포 사회의 정치력 신장 활동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 이번 투표권이 넘어감으로써 재외동포재단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투표권에 대한, 물론 외무부랑 같이 협조를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동포들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지금 현재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포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미 설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1월 초에도 일본에서 세계 한민족 대표자 운영위원들 43개국에서 온 분들하고 민단 관계자들하고 신년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여기 방문하는 한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사이트(Korean.net)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동포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정치, 국내 정치의 재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재현돼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이 손상되는 문제도 있고 동포들의 권익 향상 발전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좋은 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 본부장님, 왕자루이 대외협력부장이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쪽에 어나운스가 있었나요?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예,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말하는 공식적이라는 것은 외교부 루트를 통해서……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교통상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영세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박선영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송민순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질의하신 부분과 또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각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과 산하 각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법률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성곤·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충조·김충환·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종희·박주선·백재현·서종표·송영길·송영선·안규백·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제창·이광재·이명수·이미경·이성남·이용삼·이용섭·이윤석·장세환·정하균·조배숙·진성호·최문순·최영희·황우여 의원 발의)

3.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창일·고승덕·김동

철·김성곤·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충조·김충환·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종희·박주선·백재현·서종표·송영길·송영선·안규백·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제창·이광재·이명수·이미경·이성남·이용삼·이용섭·이윤석·장세환·정하균·조배숙·최영희·황우여 의원 발의)

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김태환·정갑윤·유정복·권영세·서상기·유기준·남경필·이경재·윤두환·김학송·박종근·김성곤·최경환·이해봉 의원 발의)

5.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강창일·김재윤·이종걸·김상희·장세환·권영길·강기갑·문학진·최인기·유성엽·김낙성·우윤근·박은수 의원 발의)

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세연·김용구·임영호·권선택 의원 발의)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9.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

(17시26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정희 의원이 소개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청원 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송민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송민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36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으로 재단업무에 재외동포지원업무가 추가된 이후, 현재 국제교류재단은 재외동포재단 출연을 최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고유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700만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도 운영비를 정부예산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사용하는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지원받음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자존심과 모국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교류재단법에 규정된 재외동포 업무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재외동포재단법에 규정된 재원에서 국제교류기금을 삭제하여, 두 재단 모두 고유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의 경우 최근 협력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과의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치 않아 협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9항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동의안에 대하여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그것이 방위비분담 협정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것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회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사동맹관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비준을 통해서 양측 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2007년 6월 1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로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수비용 및 건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9년도에 7600억 원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 금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셋째, 지원 항목 중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는 설계와 시공감리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합니다.

넷째, 현물지원으로 제공하는 모든 물자와 용역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으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은,

첫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부속서인 양허표에 기재한 대로 서비스분야의 국내 규제 및 제한 사항들을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세안 회원국들은 정보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와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분야를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아세안 회원국 방송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공동제작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희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 2건의 비준동의안, 1건의 청원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2항, 3항, 7항, 8항, 9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안 및 동의안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기관이고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교류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지원규모의 계속적 증가로 기금 고유사업의 위축 및 기금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의 주요 논점인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외동포교류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비중이 과도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사업들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며 기금의 잠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기금의 본래 목적인 국제교류사업이 재외동포교류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예산의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기금의 지원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만한 재원의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률개정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의 상반된 양 견해가 각각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현재 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개정을 통해 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조정·개선해 나갈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대로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는 입장을 선택할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의 조달이 문제시되므로 기금으로부터의 재원을 대체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안 규정방식에 있어서 재외동포교류사업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외교통상부, 예산당국 및 관련 산하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부칙에 일정한 시간적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의사일정 제7항 한-아세안 서비스협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교역을 자유화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서비스협정은 기본협정, 상품협정, 분쟁협정, 투자협정 등과 함께 한-ASEAN FTA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준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태국은 ASEAN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정에 의해 지난번 상품협정에 이어 이번 서비스협정 서명에도 불참하였으나, 협정문에 태국이 서명 완료 시 당사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ASEAN 서비스협정은 협정 본문,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와 통신에 관한 부속서 등 2개의 부속서, 서비스 양허표 및 서비스협정 하의 양해각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과 ASEAN 회원국 1개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면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두 번째 달 1일에 국내절차를 완료한 국가들에 대해 발효되며, 현재 ASEAN 회원국들 중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이미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우리나라만 통보를 마치면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 본문에서 보조금의 제한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규율한 점,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포괄적인 금융건전성 조치를 규정한 점 등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사항으로서, ASEAN 측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전반적인 협정의 내용을 볼 때 ASEAN과의 서비스협정 체결 시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었던 ASEAN의 저렴한 노동력의 대규모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 개방 수준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ASEAN 측의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협정의 체결을 통해 ASEAN의 안정적인 개방 수준에 대한 약속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불안, 정부의 잦은 경제정책 개입 등 우리 기업의 ASEAN 진출을 저해하던 기존의 높은 위험을 제거하여 향후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ASEAN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

으로 평가되므로, 한-ASEAN 서비스협정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비준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협정비준동의안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별협정으로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금번 제8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2009년 1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으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준동의를 위해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8차 방위비분담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정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둘째, 매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도별 분담금을 결정하되, 연도별 인상률에 4%의 상한선을 적용하였으며, 셋째, 연합방위력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하였고, 넷째, 군사건설비를 3년 내에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방위력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하고, 군사건설 항목을 3년 내에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부대의견이 의결된 17대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소요되는 방위비를 분담할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정문 제출의 시기적 문제점과 방위비 분담금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용도로의 지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승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틀에서 볼 때 한미동맹체제나 주한미군 주둔필요성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부대의견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방위비 분담금의 LPP 용도로의 사용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국회는 LPP 협정의 취지나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여 우리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 측이 제2사단 기지의 이전 용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기지이전 요구자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LPP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나, LPP 협정 체결 이전인 2000년경부터 미 측은 일관되게 방위비 분담금의 LPP 용도로의 집행을 주장하여 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LPP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요구 당시 뿐 아니라 국회가 방위비 분담협정에 대한 부대의견 의결 시에도 정부가 국회에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이 국회가 부대의견을 의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가 간의 협상에서 일방의 주장을 타방이 수용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러한 주장이 구체적 조치로 반복적으로 실행되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이 같은 관행을 수용한 측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이 같은 관행에 대하여 추후에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우리 정부가 LPP 협정 이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LPP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미 측과 사실상 합의한 점을 국회에 적절하게 알리지 않아 국회가 LPP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게 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할 때, 종전의 양국 정부 간의 관련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관행을 부정하는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 간의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 측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의 귀속주체가 어느 쪽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을 LPP에 사용하는 것이 LPP 협정 위반인지의 여부를 논하는 것도 우리 정부와 국회 간의 불성실 보고 책임논란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논리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종전에 2~3년 주기로 해오던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을 5년으로 장기화한 협상결과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성격 및 규모가 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방위비분담금은 정해

진 방식에 따라 증액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방위비분담 증대요구의 개연성을 감안할 때에는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청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필요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협정안의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방위비분담 협정의 체결과정 및 결과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고 이를 운용해 온 것은 영리활동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SOFA 제7조에 대한 위반이고, 둘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에 사용키로 한 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위반되므로 불법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용도로의 축적과 전용은 2007년 및 2008년 국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다고 청원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위비분담금의 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미 측과 협조하여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영리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청원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청원인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한 활용 의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기로 양해한 2000년의 사전합의 내용이 국회의 LPP 협정비준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나 앞의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동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회 간의 불성실 보고 책임논란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논리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문회나 국정감·조사가 아니더라도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증인을 채택하여 책임 있는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바, 책임 있는 증언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청문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송민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도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드는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표발의자 자체는 아니지만.

이유는 외교통상부의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재외동포재단의 2009년 예산이 약 375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정부출연금이 170억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이 195억입니다. 나머지 자체 수입 한 9억 정도 하는데 질의 두 가지는 첫째, 이 전체를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하고 교류재단 예산에서 교류기금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가.

둘째로는 타 부서에서도 이와 같이 편법이라는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을 넣는다 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방부의 경우에 정보비를 쓰기 위해서 국방부 예산이지만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행안부 등에 분산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성 자금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에 쓰는 돈은 제가 볼 때는 음성 자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부분을 가져오고 정부출연금에서 일부분을, 반반씩을 가져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역시 정부법안이니까 같이 질의할까요?

정부가 올해 아주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비준동의를 새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위비 분담을 담당하신 담당자께서 오셨을 때도 지금 비준동의안을 제출

한 것 중에 두 가지는 굉장히 잘하고 두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있다, 뭐냐? 첫째 8차 방위비 분담 협정의 내용에서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은 아주 잘했다, 그다음에 인상률 상한선을 4%로 적용한 것도 아주 애를 많이 썼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방위비가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인데 한 4~5년 전부터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소위 CDIP이라고 합니다. 컴바인드 디휀스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인데 이 항목이 점점 줄어들고 군사건설 쪽으로 몰리게 했는데, 사실은 이 방위력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한 것은 얼른 보기에 연합방위비 분담금을 LPP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 측과 합의한 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혹은 합법화시키기 위한 상당한 부분의 일시적인 편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 항목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더더구나 CFC 체제가 해체되고 미국이 상당 부분을 소위 말하는 방위력증강사업으로 우리에게 남겨 놓고 가는데 우리 자체가 지금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 CDIP 항목을 완전히 없애고 군사건설에 통합시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평택기지를 짓기 위한 편법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두 번째 지적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성격 및 규모가 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방위비 분담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증액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인데 이와 같이 2년 내지 5년, 인상률 4%라는 굉장히 기계적인,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사적으로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장관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문제였어요. 같이 고민하시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이고 숫자적인 것으로 4%, 5년 이것만 해 놓는 것보다는 항목에 더 집중하라, 예를 들면 4%가 문제가 아니라 7000억을 하느냐, 올해 7420억으로 제한하느냐 8000억으로 하느냐 그것 가지고 매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더 주더라도—2000억, 3000억을 더 주더라도—당신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의 얼마는, 그러니까 정보자산의 어떤 부분은 확연하게 한국 쪽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퍼센티지 숫자보다는 항목, 그다음에 군사력 증강의 컨디션, 조건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 협상 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비준안 8차, 9차 계속…… 땜빵이라는 용어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마는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진 또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저는 UN PKO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고 본 의원도 유사한 법안 제출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적은 UN PKO에 한정되어서 된 법안이라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사전동의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만약에 이게 국회와 행정부 간에 현행 헌법 체계상 운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법률안에서 3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UN PKO 350명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UN PKO 하면 이미 동명부대에 가 있는 것만 해도 350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1000명 정도로, 사실 우리가 한 나라에 1000명 정도 UN PKO로 가 있다고 해서 국방력에 큰……

그래서 규모로 이야기한다면 1000명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님,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동포재단의 지원 문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분리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처에서 워낙 타이트한 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좀 쓰자는 것이 기금을 기획재정부에 전체 다 모아 가지고 기금을 쓰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동포재단은 분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당장 동포재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만 보충하게 되면 저는 원칙적으로 동포재단하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잘한 것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다만 한 가지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하고 군사건설을 왜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합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이 지난 30년 동안 쭉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또 내용 면에 있어서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전투 관련 시설을 현물로 제공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방부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협상은 외교부가 했지만 거기의 소요 판단은 국방부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협력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요 판단한 항목별로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송영선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민순 위원님께서 UN PKO 문제, 현재 이미 레바논에 350명 해 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한 1000명 정도로 확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저희 정부 정책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8항의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의 통상 절차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2월 24일과 26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간사 위원들 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민순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두 송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남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황진하 위원님과 구상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환 장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 또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상찬	권영세	김충환	남경필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송영선	신낙균
안상수	윤상현	이미경	이범관
이춘식	이회창	정세균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청가 위원(1인)

정몽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영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차관보	이용준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정책기획관	노광일
동북아시아국장	조태영
남아시아대양주국장	이경수
북미국장	장호진
국제기구정책관	신동익
조약정책관	황승현
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다자통상국장	이태호
FTA교섭국장	박효성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성준
기획이사	김성엽
사업이사	한영희
기획조정실장	김회길
정책연구실장	김태환
총무인사부장	유기성
인사교류부장	황오석
문화예술교류부장	송중석
문화센터소장	윤금진
한국학사업부장	박경철
연구장학사업부장	박상배
미디어사업부장	박미숙
검사역	김찬곤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박대원
이사	조원호
이사	장시정
이사	장현식
이사	안동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
기획이사	금병목
사업이사	강남훈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선숙	정세균	민주당	2009. 2. 10